

창업기업 육성 핵심거점 '이노플러스 스테이지' 가동

광주 본촌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준공
428억 투입 입주공간 84실 7층 규모
스테이지·스타트업복합허브센터 연계
'창업기반시설 삼각벨트' 지원체제로



'이노플러스 스테이지'는 총 428억원이 투입된 지상 7층, 연면적 1만4천46㎡ 규모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다. (사진) 북구 본촌산단에 위치한 이 시설은 기업 입주공간 84개실을 비롯해 업무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 최대 규모의 창업 거점으로 지난 2월 완공됐다.

광주시가 제조 기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인 '이노플러스 스테이지(INNO+ STAGE)'를 중심으로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조 기반 유망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신규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이노플러스 스테이지'의 개관을 앞두고 4월1-15일 입주기업들을 모집한다.

'이노플러스 스테이지'는 '제조 혁신(Innovation)을 더하다'는 의미와 '스타트업 광주(Startup Gwangju)'의 약자를 결합한 것으로 광주시가 창업가들에게 성공적인 도약의 무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입주기업 모집 대상은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본촌산단 입주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지역 전략산업·신기술 분야 기업 등은 입주기업 선정 심사에서 우대한다.

입주기업의 최초 입주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이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최대 입주 기간은 10년이다.

임대료는 계약 면적 1㎡당 연간 5만7천400원(부가세 포함, 3층 이상 입주기업)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해 초기

창업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췄다.

입주기업에는 독립형 사무 공간과 회의실, 교육실, 라운지 등 업무지원시설을 제공하며 'IR(기업설명회)룸', '커뮤니티허브' 등 기업 간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환경도 제공한다.

특히 시제품 제작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등 제조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입주 희망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참고해 전자우편(power5@gjp.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입주 희망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7일 현장 설명회와 시설 투어를 진행한다. 입주기업 최종 결과는 심사를 거쳐 4월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개관한 '스테이지'(빛고을창업스테이션)와 최근 완공한 '이노플러스 스테이지'(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올해 하반기 개관할 '스타트업복합허브센터'를 연결하는 창업기반시설 삼각벨트로 창업지원 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이노플러스 스테이지와 양산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올해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시는 창업기반시설 삼각벨트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창업도시를 만들겠다"며 "이노플러스 스테이지가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고 '부강한 광주'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단체장 참석 확대

기존 시·군·구청장협의회회장 2명 추가
이재명 정부 '지방우대 원칙' 실현 기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함께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에 기초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협력회의 내 기초단체장 구성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해 참석했으나, 시·군·구별 상이한 행정

환경을 국경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형별 특성에 따라 시·군·구별 각 1명이 참석하게 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지방우대 원칙'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방 정책 관련 최고 회의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부의장), 시도지사, 재경부·교육부·행안부·기획재정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 지방단체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다. /김진수 기자



행정통합 정책협의체 2차 회의.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과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31일 나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정책협의체 2차 회의에서 행정통합 관련 주요 안건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이달 말까지 2개 부문 접수

광주시는 31일 "2027년 예산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4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대상 사업은 단년도에 완료되는 광주시 소관 사무로 시정참여형, 청년참여형 등 2개를 접수한다.

시정참여형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수

혜도가 높은 5억원 이하 사업이다. 청년참여형은 일자리, 창업 지원, 맞춤형 교육, 창작활동 등 청년 정책 사업으로 예산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민원성 사업, 특정단체 증빙성 사업, 1회성 공연 축제,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참여는 광주시 누리집 시민참여예산시스템, 주민e참여시스템 또는 시민광장 광주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전자우편(kmc748@korea.kr)과 우편(광주서구 내방로111, 예산담당관실) 신청도 가능하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중동발 위기 대응 행정력 집중

민생경제 TF 가동·예비비 적극 활용
행정통합·섬박람회 철저한 준비 강조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31일 중동 상황 대응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와 산불 예방 대응을 당부했다.

황기연 권한대행은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무장 정책회의를 열어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주요 현안으로 생각하는 것들 중 가장 첫 번째가 중동 상황 대응"이라며 "TF에서 논의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민

들게 도움이 될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특히 황 대행은 "기존 예산으로 부족하면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해서라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정부 비상경제대응체계에 발맞춰 중동 상황 비상대책 TF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 황 대행은 "행정통합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며 "7월1일 전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통합 이후에도 시민들께서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끊김없이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독려했다.

또한 그는 "매주 전남·광주 정책협의회를 열

어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빨리 결정해 후속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1차 목표는 5월 말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마무리하는 것이고, 6월에는 후속 작업을 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해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 시 모든 서비스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 황 대행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큰 국제행사인 만큼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자"며 프로그램, 시설물 안전, 교통대책, 우기 대비 배수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김재정 기자

꽃피는 봄에도, 어르신들의 밥상에 여전히 찬바람만 불니다.

텅 빈 냉장고, 다 쉬어버린 김치, 말라붙은 라면 국물.
월 2만원, 정기후원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해 주세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 #전국 26개소 무료급식소 운영 #독거노인 기초생활 개선지원

ARS 무기명 후원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1811-1004**